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 7. 18.(일)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 담당자	서원형 ☎ 440-3457
사 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화수화평 재개발 조합과 도시산업선교회**  
**상생의 지혜 모아야**  
**- 오랜기간 원도심 재생 희망을 가진 지역주민의 염원 생각해야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인천도시산업선교회(미문의 일꾼교회)의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 구역이었으나, 최근 시공자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면서 2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 구역 안에 있는 인천산전은 국내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담긴 교회건물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961년 설립된 인천산전은 1978년 이른바 ‘동일방직 사건’ 때 여성

노동자들이 피신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며 교회 측은 현 위치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며, 인천시는 지난 6월 23일 인천산선이 포함된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사업을 조건부 수용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비계획은 새로 교회를 구역 안에 포함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없으며, 장기간 사업의 정체로 인한 정비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게 되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같이, 교회를 이전하고 화평동 1-1번지 일대 18만㎡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83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교회는 현 장소에 존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교회를 옮겨 새로 지을 수 있는 대체 용지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교회의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교회는 문화재나 인천시 건축자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로서 존치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강구해 역사적 가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존치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으며, 이전 또한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해 교회 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보류 결정을 내리고, 6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 등을 거친 후 6월 23일 다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개최 결과 재개발 사업은 관계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 것이고, 2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정체로 빈집이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 빠른 사업추진을 갈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 또는 표지석 설치 등을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에 인천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민주화나 노동운동의 가치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은 깊이 공감하나, 문화유산 보존가치만큼이나 오랫동안 원도심 재생 희망을 가졌던 지역주민들의 염원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 시는 주민과 교회의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히며,

“도시계획위원회 권고내용처럼 조합과 교회에서 별도의 공간 마련이나 표지석 설치 등을 통해 조정을 원만히 하는 것이 관건이고,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민과 교회 측의 협의를 중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